

울산매일

기사입력 시간 : 2008-05-21 오후 10:20:04

▶ 인쇄하기

■ 지역 문화예술계 '문화재단' 설립 핫 이슈

'문화도시 울산' 견인차 역할 기대
정부, 문예지원 기능 지자체 이양
환경지원중심 맞춤형 전략 필요

새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의 변화에 따른 지방 정부의 다양한 대응책이 절실한 가운데 지역 문화예술계의 숙원인 '문화재단' 설립이 재차 문화예술계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인근 부산시, 경남·충북도 등 광역단체 등에서도 올 하반기를 목표로 '문화재단'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문화도시 울산'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문화재단 설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정부 문예정책의 기조 변화

지난 2일 문화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주관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 문화체육관광 정책' 토론회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관련 다양한 정책이 제기됐다.

문예지원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관련 기존 '사전지원'에서 '사후지원', 또는 '다년 지원' '우수작품 재공연' 등을 추진하고 예술위원회의 공모사업 등을 폐지, 그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등 새 정부의 문예정책이 방식은 '재정지원 중심'에서 '환경지원 중심'으로, 대상은 '예술창작 진흥'에서 '국민문화 향수', 목표는 '예술진흥'에서 '문화발전'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지원 중심'으로의 변화는 맞춤형 지원, 목표와 성과 지향적 지원으로 돈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예술현장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해 그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또 '국민문화 향수'로의 지향은 문화 환경을 조성해 지원자가 목적의식을 갖고 프로젝트 제안 후 예술가가 참여하고 예술가 아닌 다양한 대상을 지원하거나 재정지원이 아닌 기회지원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문화발전' 지향은 '예술은 문화의 한 장르로 문화발전을 위해 기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살아가는 환경, 국가 경쟁력 등 삶의 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또는 공동체와 공공에 대한 생각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같은 정책제안 배경에는 기존 예술위원회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 성과가 크게 없었다는 지적으로 지방 정부로의 기능(권한) 이양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한 예로 지난 73년부터 2007년까지 문예진흥 사업에 사용한 지원총액이 약 1조 4,000억 원이나 대부분 예술가들은 '88만원' 세대에도 못 미치는 '55만원' 소득을 벌어들여 연극배우의 53%, 영화관계자의 44%, 문학의 35%, 미술의 30%가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자료(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 지방 차원의 문예정책은

최근 서울시는 오는 2010년까지 1조8,000억원을 투입해 서울을 리모델링하는 '창의 문화도시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문화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활용하는 '컬처노믹스' 개념을 바탕으로 한 이 계획은 '문화정책 지도'로 2010년까지 문화예술 창의기반과 도시 인프라를 구축해 문화를 통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다.

인근 부산은 문화예술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올 하반기에 (가칭) 부산문화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문예진흥기금 100억 원으로 재단을

설립한 뒤 내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20억 원을 출연해 총 3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남도도 하반기에 문화재단을 출범하고 충북도 역시 도정의 최우선 목표를 '문화선진도'로 삼아 2010년까지 '문화재단' 설립 플랜을 밝혔다.

전국 광역단체에서 이처럼 문화재단 설립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는 새 정부의 문예정책이 '문화 환경 중심'으로 지방 정부로의 과감한 이양을 전제하고 있어 이를 대비하는 지방 정부의 움직임이라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아직 울산은 '문화'보다는 '경제'위주의 관 정책으로 문화재단 설립이 자금 부족이란 이유로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기초단체에서 주도하는 각종 축제가 단체장의 홍보용으로 변색하면서 지역 수십 개의 축제가 백화점식으로 운영, 예산낭비는 물론 대표축제로의 면모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축제의 통합 운영, 실질적인 문예정책의 연구·발전방향 제시 등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문화재단은 관 주도의 문화행정을 민간으로 이양, 공무원 행정에서 하기 힘든 수익창출과 기부 후원이 가능하고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이 능동적으로 업무추진을 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김흥두 기자 khd@iusm.co.kr

울산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력 : 2008-05-21 오후 10:20:04